

# 올해 계육업계 어떤 일들이 있었나?

편집부

## 1. 병아리값 사상 최고가 경신

올해 초 300원대로 시작한 육용병아리값이 지난 5월 수당 800원을 기록,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05년 5월 700원을 기록한 이후 4년만에 700원대를 넘어선 것이다.

이처럼 병아리값이 사상 유례없는 고가를 형성하게 된 이유로는 종계 생산성 악화로 인해 병아리 생산량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2008년 12월부터 시행된 음식점에서의 닭고기 원산지 표시제 확대 시행과 냉동비축물량 감소 등의 이유로 닭고기 수요는 증가한 반면 병아리 부족상태가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병아리값이 상승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부분의 종계장들은 계열사나 큰 부화장들과 종란납품계약을 함으로써 병아리 가격과는 무관하게 생산성 저하로 인해 상대적으로 피해만 보았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종계·부화업계의 생각이다.

닭고기 소비가 늘어나서 병아리 수요가 함께 증가하여 강세가 유지되었다면 매우 바람직한 일이지만 병아리 수요는 증가하는데 반해 생

산성이 낮아져서 실제 수요보다 가격이 더 높게 형성되는 모순이 나타난 것.

이러한 병아리값 상승으로 인해 환우가 확산되면 내년 초 불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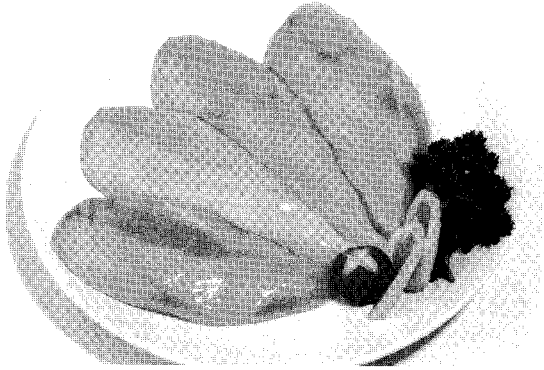
실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12월 육계관측에 따르면 2009년 1~10월 육용종계 입식 마리수는 평년(473만마리)보다 9.0% 증가한 516만마리로 환우 증가로 종계도태가 지연될 경우 2010년 2월 이후(특히 4월 이후) 사육수수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 종계 환우 자제와 지속적인 노계도태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 2. 닭가슴살 열풍!

올해 닭고기 소비 트렌드는 단연 ‘닭가슴살’이라고 볼 수 있다.

닭가슴살이 콜레스테롤과 지방은 적고 단백질 함량은 높아 건강과 근육 발달에 좋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퍽퍽하고 맛이 없다는 부정적 인식을 뛰어넘었다.

닭가슴살 소비가 이처럼 센세이션을 몰고 온 것은 TV, 신문, 잡지 등에서 배용준, 이범수, 비, 옥주현, 이훈 등 많은 인기 연예인들이 체형관리와 다이어트를 하면서 닭가슴살을 주로



먹었다고 밝힌 것이 계기가 되었다. 지난 10월 대한공연을 가진 ‘팍의 여왕’ 비욘세도 내한하기 전 미리 식사는 기름기를 뺀 닭가슴살 부위를 요청했을 정도로 ‘닭가슴살’의 인기는 국내를 뛰어넘어 세계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가슴살 소비가 전년 동기대비 14.6% 증가했다고 한다.

또 온라인 쇼핑몰 옥션이 지난 6월 15일 발표한 ‘2009년 상반기 히트상품 10’ 중에서 닭가슴살은 4만1천개가 팔려 전체 6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닭가슴살을 이용해 캔 제품을 출시한 H사의 경우 지난해 4월 출시 당시 매출이 3억원 정도에 불과했던 것이 올해 7월말에는 500% 정도 늘어난 15억원을 돌파하는 등 놀라운 판매 실적을 기록했다.

이는 외식업계도 마찬가지. 여름철에 봄처럼 일어나는 다이어트 풍속이 갈수록 계절에 관계없이 생활화 됨에 따라 외식업계는 저칼로리 메뉴를 잇따라 출시하고 있다. 이 메뉴의 중심에도 닭가슴살을 이용한 메뉴가 주를 이룬다.

닭가슴살 수요증가는 부분육 시장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삼계탕을 제외한 닭 소비에서 부분육의 비중은 25%였으나 2012년에는 5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3.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확대로 국내산 닭고기 소비 활성화

쇠고기에 이어 닭고기, 돼지고기의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가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시행돼 1년을 맞이했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는 제품의 원산지를 명확히 표기함으로써 명확한 정보제공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구매 결정권을 보장하며, 유통단계의 투명화, 질서 확립을 통해 유통 및 소비의 선진화를 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음식점에서의 원산지 표시제가 시행됨에 따라 음식점들은 수입산에서 국내산으로 대체하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였고, 이는 국내산 닭고기 소비 증가로 이어졌다.

실제 올해 총 도계수수는 6억7천6백만수로 추정되는데, 이는 지난해 6억2천6백만수 보다 8% 정도 늘어난 양이다. 그리고 닭고기 수입량은 올해 59,700톤(검역기준)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지난해 62,141톤에 비해 4% 정도 줄어든 양이다.

이는 원산지 표시제가 수입 닭고기를 어느 정도 견제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실시되고 있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는 치킨 등 배달음식을 제외한 모든 음식점이 해당돼 배달음식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치킨이나 돈까스 등에 원산지 표시가 없어

**메뉴** (즐거운 식사시간...)

돼지갈비 (국내산)	8,000원 (200g)
삼겹살 (호주산)	8,000원 (200g)
삼겹살 (국내산)	11,000원 (200g)
돼지갈비 (국내산과 미국산 섞음)	9,000원 (200g)
담볶음탕 (국내산)	9,000원
삼계탕 (중국산)	7,000원
공기밥 (쌀: 중국산)	1,000원
비빔밥 (쌀: 국내산)	5,000원
김밥 (쌀: 국내산과 미국산 섞음)	2,000원
배추김치 (국내산)	

소비자들의 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현재 농산물품질관리법에는 영업장의 메뉴판이나 계산판에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식품위생법에는 이와 관련한 특별한 규정은 물론, 영업장을 벗어난 배달음식에 대해서도 표시의무가 없다고 한다. 영업장에는 표시 의무를 규정해 놓고 배달하는 조리음식에 원산지 표기를 하지 않아도 허용된다는 것은 규정에 허점이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배달 음식을 포함한 모든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며, 단속기관의 철저한 단속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음식점의 불법행위를 부추기는 꼴이 되고 말 것이다.

#### 4. 신종 인플루엔자로 업계 긴장

전 세계가 신종플루로 몸살을 앓고 있다.

올해 4월말 멕시코에서부터 시작된 신종 인플루엔자(H1N1)는 전 세계로 급속도로 퍼져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신종플루로 인한 사망자가 11월 22일 현재 7,826명을 넘어섰다. 국내 사망자도 11월 25일 현재 104명으로 늘었다.

전 세계 맹위를 떨치고 있는 신종플루 바이러스는 인수공통으로 감염된다는 점에서 축산인에게도 적잖은 심려를 안겨 주었다.

실제 신종플루가 국내 상륙 당시 언론에서는 멕시코에서 '돼지독감'이 발생했다는 내용을 앞다투어 전하자 신종플루와 관련한 언론 보도가 처음 나온 4월 24일 당시 전국 도매시장의 돼지 지육 평균가격(1kg당)은 4,929원이었으나 4월 30일 3,745원까지 하락했다. 그러나 돼지독감이라는 말 대신 지난 5월 1일 WHO에서 신종 인플루엔자(H1N1)로 공식 명칭을 바꾸자 돼지고기 값은 바로 반등, 4,000원대를 회복했다.

하지만 신종플루의 여파로 9월 9일 개최 예정이었던 구구데이 행사를 시작으로 우수축산물 페스티벌, 양계인 대회, 세계 학교우유 급식의 날, 코리아 푸드 엑스포, 2009형성한우 축제 등 굵직굵직한 행사들이 모두 취소됨에 따라 농축산물 소비에 악영향을 미쳤다.

이같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농축산물 소비홍보 행사가 줄줄이 취소됨에 따라 닭고기를 비롯 농축산물 소비는 뒷서리를 맞았다. 실제로 닭고기 프랜차이즈업체의 매출은 주춤

해졌고, 일반 소매점에서도 닭고기 판매가 줄어들었다고 한다. 돼지고기를 원료로 하는 햄·소시지·만두 등 육가공식품 소비까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종플루로 학교들이 잇달아 휴교에 들어가면서 우유급식량도 10~20%가량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신종플루 여파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든 지금 축산물 소비촉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5. 육계 계열화 산업 발전방향 조사·연구

국내에서 '계열화 사업'이 처음 도입된 축종은 '육계산업'이다. 계열화 사업이 도입되기 전 국내 육계농가는 시장의 초과수요와 초과공급에 대한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면서 연쇄도산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1980년대 말 계열화 사업이 국내에 정착함에 따라 시장위험을 계열화 사업자가 부담하게 되고 농가는 생산에만 전념하며 약정된 사육수수료를 받는 등 안정적인 소득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렇듯 계열화 사업은 과거 투기산업이었던 육계산업을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산업으로 정착시킨 경영방식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계열화 사업이 정착되는 과정에서 농가와 계열업체는 끊임없는 갈등을 빚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림수산식품부와 농협에서는 가금수급안정위원회 사업의 일환으로 육계 계열화사업에 대한 성과 및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키로 하고, 용역업체로 한국축산경제연구원을 선정, 지난 6월

부터 연구를 진행했다.

이와 관련 지난 11월 16일 가금수급안정위원회는 '육계 계열화사업 발전방향'에 대한 조사연구 중간보고회를 개최했으며, 이번 연구를 담당한 한국축산경제연구원은 이날 보고회를 통해 계열화 사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계열화에 대한 정의를 법률에 담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럴 경우 계열주체와 농가 간 분쟁 발생시 민사소송 이전에 조정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도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축산경제연구원은 또 계약내용을 둘러싼 사육농가와 계열업체 간의 갈등과 생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도계육 가격 결정 체계, 그리고 병아리와 사료 등 원자재에 대한 품질 불만, 농가 사육시설 현대화 미흡, 종계·부화장 등에 대한 기초통계의 부족, 계열업체와 농가 간 의사소통 부족 등 육계 계열화 사업의 문제점을 크게 여섯가지로 분류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으로 ▲축산법에 계열화 생산(유통협약 포함) 조문 신설 ▲계사시설의 현대화 ▲육계 통계 정립 ▲도계육 유통 개선 ▲원부자재 구매 방식 개선 ▲비상장 계열업체의 농가에 대한 주식 배당(우리사주 형태) ▲전국 단위 육계협동조합 설립 ▲표준계약서 제시 ▲중재위원회 설립 ▲농가협의회 활성화 방안 ▲계열화 사업 평가단 운영 등을 제시했다.

본 연구자료는 재 검토된 후 최종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본 연구자료가 국내 계열화 사업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해 주기를 기대해본다.

## 6. DDA 및 FTA 가속화... 업계 자구책 마련 고심

지난 10월 15일 한·EU FTA 협정문에 대한 가서명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양국 통상장관 간에 이뤄졌다.

이날 농림수산식품부가 발표한 협상 결과에 따르면 냉동삼겹살(25%), 쇠고기(40%), 닭고기 등에 대해 10년후 관세를 폐지키로 했다. 분유(176~36%)는 현행관세를 유지하고, 치즈(36%) 등 일부 낙농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10년 이상에 걸쳐 폐지하되 무관세 물량(TRQ)을 배정키로 했다.

이와 관련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유럽연합과의 FTA로 양돈분야가 1천55억~1천2백14억원, 낙농 594억~805억원, 양계 201~331억원, 쇠고기 370~526억원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DDA, 한·미 FTA에 이어 한·EU FTA까지 대외적인 수입개방 압력에 국내 축산업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본회를 비롯한 생산자 단체에서는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해 본회는 DDA, FTA 등에 대응하여 안전한 축산물의 생산과 수입축산물에 대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도계장 시설 등 각종 시설 지원 등 예산지원 사항과 축산법에 가축의 계열화 생산 관련 규정 신설 등 관련 법률 등의 제도 정비를 통해 계육산업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닭고기 포장유통 의무화 전면 시행에 따른 포장자동화 시설 지원, 도계장 시설 지원, 난계대 전염병 근절을 위한 원원종계장(GPS) 설립지원, 육계사 지열난방시스템 시설 지원, 육계사 폐열회수 환기시스템 시설 지원, 부분육(컷업 및 발골) 생산시설 지원 등 예산지원 관련사항과 축산법에 가축의 계열화 생산 관련규정 및 유통협약제도 신설, 신축축사 담보대출비율의 상향조정, 닭고기 수출관련 사항, 국가차원의 통계정보시스템구축(종계, 부화, 육계), 닭고기 군납제도 개선, 닭고기 포장유통 의무화 전면시행, 씨알관리를 위한 사항, 축산제조업에서의 원활한 외국인 근로자 채용, 닭고기 냉장온도관리 및 유통기준 강화, 배달용 닭고기(치킨)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도 의무화 등 제도개선에 대한 내용을 지난달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한 바 있다.

## 7. 닭고기 유통감시단 출범

닭고기 판매업소나 음식점에서의 부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

매년 많은 물량의 닭고기가 수입되고 있으나 대부분은 국내산 닭고기로 판매되고 있는 것이 우리 계육업계의 현실이다.

이에 본회는 이런 닭고기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 등 부정유통을 근절해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닭고기를 공급하고, 나아가 국내 육계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닭고기 유통감시단을 발족, 감시활동에 본격 착수했다.

닭고기 유통감시단은 현재 10개 회원사의 소



속 농가와 임직원 등 총 8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감시원들은 앞으로 3년 동안 닭고기 원산지의 허위표시와 미표시, 수입 닭고기가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의 감시활동을 펼치게 된다. 특히 평상시에도 유통감시원은 수시로 닭고기 판매업소 등에 대한 감시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한편 닭고기 원산지 표시 등 위반업소를 적발했을 경우 포상금은 관련 규정에 의해 최소 5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된다.

본회는 현재 닭고기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가 시행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국내 닭고기 소비량의 50%가 넘는 배달용 닭고기의 포장지에는 원산지 표시 의무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만큼 배달용 포장지에도 원산지가 표기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있다.

## 8. 닭고기도 이제 B2B 시대!

지난 7월 문을 연 사이버거래소는 그동안 친환경·명품 농산물을 일반 소비자에게 파는 기업-소비자 거래(B2C)만 해왔으나 지난 10월 28일부터 농수산물의 기업간 거래(B2B)가

시작됐다. 농수산물의 기업 간 사이버거래가 이뤄지기는 처음이다.

총 28개 거래 품목 중 축산분야는 계육, 돈육, 계란, 한우 등 4개 품목이 거래되는데, 본회 회원사가 이에 참여하게 되었다.

본회는 회원사가 보유하고 있는 생계의 과부족물량이 외부 유통시장을 통해 거래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비합리적인 가격등락요인을 배제함으로써 불필요한 유통비용의 절감은 물론 닭고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B2B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사이버거래소의 B2B거래는 공급업체와 구매업체간 복잡한 중간 유통과정을 대폭 축소 하면서 평균 13.75%의 유통비용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가 정상 운영될 경우, 전체 사이버거래추세(2008년 630조원, 연평균 23.8%)에 비해 미미한 수준인 농수산물 분야 B2B 거래가 확대(2013년 8천억원)될 것으로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망했다.

기업간 거래(B2B)에 참여하고자 하는 판·구매 업체는 사이버거래소(www.eat.co.kr)를 통해 등록하면 심사 후 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

판매 수수료는 시범기간(2009. 10~12) 동안에는 무료로 거래가 가능하며, 2010년부터는 판매자가 부담하게 된다.

거래 수수료는 평균 0.65%로, 판매 수수료가 0.3%, 시장 사용료가 0.35%이다. 또 거래 실적에 따른 고객등급별로 수수료 추가 할인 혜택도 있다.